월/요/광/장

강은국

‘빛의 고을’ 광주 영원히 빛나기를

지난해 3월 전남대 교환교수로 파견될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다. 광주공항에 도착해 전남대 교수아파트까지 오는 사이에 시선을 강하게 자극한 것은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커다랗게 새겨진 ‘빛’이라는 글자였다.

며칠 후에야 이 ‘빛’ 자가 ‘광주’란 도시의 상징임을 알 수 있었다. 광주의 한자어가 ‘光州’로 뜻을 풀이하면 ‘빛의 고을’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깊은 뜻을 느낀 나는 1년간 생활하게 될 ‘빛의 고을’ 광주를 주제로 글을 써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강의에, 연구에, 기타 자질구레한 일에 쫓기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덧 귀국 일자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늦었지만 그 무언가를 남기지 않으면 내가 1년여동안 생활한 광주시민에게 무형의 빚을 지는 것만 같은 죄의식에서 펜을 들게 되었다.

‘빛’이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삼광(三光), 삼정(三精)이다. 다 같이 ‘해, 달, 별’을 아우르는 말로서 ‘해, 달, 별’이 빛’의 본원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 인간세상은 ‘해, 달, 별’이 있음으로 해서 낮이나 밤이나 빛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렇듯 고마운 빛을 선사하였을까?

중국의 설화 하나가 떠오른다. 아주 멀고 먼 옛날, 우주국(宇宙國)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국왕의 이름은 ‘태양(太陽)’이었다. 국왕에게는 천사 같은 미모와 비단결 같은 마음에 지혜까지 뛰어난 현처(賢妻) ‘월량(月亮)’과 부모를 존경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성성(星星)’이라는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

국왕 태양은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다. 생업에 충실한 백성들도 윤택한 생활을 하며 국왕의 보호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롭고 행복한 우주국에 재앙이 닥친다. 오래 전부터 우주국을 호시탐탐 노리던 주동국(宙洞國)이 우주국의 변경을 침입해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국왕 태양은 나라의 안녕과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한다.

부인 월량은 전장의 남편이 근심스러워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찾아 떠난다. 월량과 자녀들은 불행하게도 주동국 적장에게 잡히고 만다. 월량의 미모에 반한 적장은 그 녀를 첩으로 삼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하지만 월량의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 월량은 마침내 지혜를 발휘해 자녀들을 이끌고 적장의 마수에서 벗어나 가던 길을 재촉한다. 하지만 적들이 끈질기게 추격하는 바람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만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사이 국왕 태양은 수많은 싸움 끝에 침략자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왔다. 부인과 자녀들이 적장의 마수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한 태양은 그 길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낮에만 길을 재촉하는 태양은, 적들의 눈을 피해 밤길만 걷는 월량 및 자녀들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 태양은 이 때 찬란한 빛이 낮이나 밤이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해와 달과 별이 지구상에 사는 온갖 미물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빛을 발했던 것이다.

인간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삶을 영위하게 해준 우주국의 해님과 달님, 별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들을 본받아 각자의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빛의 고을’을 이룩했듯이 말이다.

원님은 원님으로서 한결같이 일편단심으로 이 땅의 백성을 생각하고, 관아는 관아대로 오로지 백성을 위해 밤낮없이 동분서주하고, 백성은 백성으로서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등 본분에 충직했기에 광주가 ‘빛의 고을’로까지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민은 민으로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정부는 민심을 잘 살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장관은 민심에 순응하여 백성을 위해 정사를 펼치는 등 삼위일체를 이룬다면 ‘빛의 고을’ 광주는 더욱 빛날 것이다. ‘빛의 고을’ 광주가 영원히 빛나기를 축원한다.

〈중국 푸단대 교수·전남대 교환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최병근

‘배심원제’ 성패는 국민 관심에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시작된 지 110여 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전적으로 직업 법관인 판사에게 귀속돼 왔다.

하지만 사법부의 많은 노력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결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강도·살인 등 중죄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가 있다. 그러나 순수한 배심제나 참심제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나라 헌법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 배심제와 참심제의 요소가 복합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매우 독특한 제도로 탄생됐다.

그래서 순수한 배심제나 참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칭도 ‘국민참여재판’이라 했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배심원이 아니지만, 일단 ‘배심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무작위로 추출되는 배심원들이 과연 얼마나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또 자칫 개인적인 감정에 흘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다만 판사에게 권고적인 효력만 갖는 것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배심원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래서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법원이 어떻게 이 제도를 운용할 것인지가 숙제이, 앞으로 그 운용성과에 따라 배심원의 권한을 점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OJ심슨 사건에서 보듯이 재판이 실체진실 발견보다는 스포츠화되고, 또한 배심원이 되면 많은 시간을 들여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대생활에 바쁜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느냐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크나 큰 역사적 의미에도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참여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지와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기고

이정섭

‘친환경 유기농업 메카’를 꿈꾸며

담양군이 지난해 세밑, 전남도 종무식에서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미 FTA협상을 비롯한 농업개방의 가속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과 지자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벼 대체작목 전환 등 농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값진 결실이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친환경농업을 지켜내려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 방제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농업인의 노고와,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공직자들의 열정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친환경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 향상과 더불어 웰빙붐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연생태계의 순환법칙을 역행해 온 기존의 농업방식은 머지않아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 농업도 생산성은 물론 품질과 안전성, 자연환경과의 친화성 등에서 시급히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담양군은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기초로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89억원을 투입해 전체 경지면적의 37%인 3천852ha를 친환경 생산단지로 전환,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목표면적을 달성했다. 무농약·유기농 인증면적도 도내 평균 5%보다 높은 14%인 1천495ha를 확보했다.

또한 담양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의 친환경 대체작목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교우위 작목인 딸기·멜론·방울토마토 등 시설하우스와 포도·복분자·블루베리 등 13개 대체작목 238ha에 영농보조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시설원예의 경우 벼 재배보다 10배가 넘는 높은 소득을 올려 실효성이 있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렁이·오리·쌀겨 농법 등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한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윤작과 객토, 녹비작물 재배 등 흙의 생명력을 높이는 지력증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dy 대숲맑은’ 공동 브랜드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믿고 사는 ‘윈-윈’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계기로 슬로시티의 상징인 달팽이 마크를 친환경농산물에 부착해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려는 채비도 서두르고 있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영산강 시원지인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어렵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군민 제일주의 자치행정이 상호 협력해 담양을 ‘친환경·유기농의 메카’로 가꿔나가자.

〈담양군수〉

음악회 ‘초대권 문화’ 근절 급하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음악계의 초대권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싼 대관료를 지불했는데도 관객은 찾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해낸 것이 초대권이다. 또 학위에 필요한 공연실적용으로도 독주회를 곧잘 열지만 이 때도 가족과 친척·친구들을 총동원해 초대권을 뿌린다.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 음악인들마저 초대권이 아니면 얼굴을 내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초대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양처럼 전문적인 지역사회 음악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후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만약 서양음악에 대한 지역 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초대권 없이도 많은 청중이 객석을 메울 것이며, 대중음악처럼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예술성 높은 음악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 분위기도 밝아질 것이다.

▲유환권·광주시 북구 오룡동

최저 임금제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 해고 해서야

며칠 전 아파트 입주민회의에 다녀왔다. 회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때문에 경비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아파트 경비인력의 월 급여는 비록 최저 생계비에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65만~70만원 정도다. 아파트 경비직은 특성상 고령이며 큰 노동강도를 요구되지 않아 그야말로 없어서 못할 지경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을 적게 줄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돼버렸다. 이로 인해 현재 아파트 경비인력의 월 급여가 최대 100% 가까이 인상될 처지에 이르자 관리사무소에서는 인력 감축에 나섰다. 많은 노인들이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최저임금법 때문에 잃게 된다면 이런 정책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내가 사는 760여 가구의 단지에서 5명 안팎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고령 인력들이 길거리로 내몰릴까 걱정이다. 최소한 서민 아파트의 경비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든지, 감액률을 재조정해 고용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노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일 것이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사설

전남 타르 피해 확산 보상대책 서둘러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전남 연안 김 양식장 등의 수산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남은 수산물의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데다 김 수확철이어서 기름이 직접 유출된 태안보다 오히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현재까지 전남 연안에서 수거된 타르 덩어리는 850t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섬지역 등에 남아있는 것 등을 합하면 전체 원유 유출량 1만9천t의 10%인 1천t을 넘어설 전망이다. 7~10일까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사리’여서 이 기간 동안 타르 덩어리가 연안으로 더 몰려올 것으로 우려된다.

타르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김 양식장의 지주목과 김발 등에 들러붙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 특히 김 가공과정에서 타르가 한 조각이라도 유입되면 수확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타르가 유입된 전남해안은 전국 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소득이 1천600여억원에 달한다. 김 피해액만 1천억원이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해조류에 미치는 타르 영향과 모래와 펄 속에 파고든 기름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전남지역의 피해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 입증이 어려울 뿐더러 보상절차도 까다로워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로서는 최악의 경우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상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민사피해보상제도 보완 등 체계적인 법률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기 바란다.

정부조직 개편 신속·과감하되 신중해야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의 조직과 관련, 현행 18개 부(部)를 12~1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다. 이 당선인은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기능 중심의 재편을 다짐했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각 부처에 분산된 중복성 업무의 기능별 통·폐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은 정부는 세계적 추세다. 정부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팽배하다.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9만5천명 증원하고 정부위원회가 416개에 달하는 등 역대 정부 중 가장 비대한 조직을 구축했다. 오죽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기구 축소에 찬성하고 있겠는가.

문제는 현 정부와의 지나친 차별화 의식이다. 대표적으로 통일부를 들 수 있다. 외교부와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과소 평가해선 안 된다. 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민족 내부의 문제까지 맡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해양수산부도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와의 통폐합이 유력해지면서 전남도과 부산시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둔 여수시와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해체로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람회가 국가계획인 만큼 어떤 식이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직 개편은 신속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집권 초기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지 않으면 역대 정권에서 드러나듯 관료집단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할 수 있다. 인수위는 신속하고 과감하되 부처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위기의 서해안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높은 산과 빙하, 피요르드 해안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이자 바다 생물들의 보금자리인 이곳에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닥쳤다. 알래스카산 원유를 싣고 야간 운항 중이던 유조선 ‘엑손 발데스’호가 암초에 부딪쳐 좌초한 것이다.

21만5천t짜리 유조선의 파손 부위에서 새어나온 24만배럴의 기름이 해안을 덮쳤다. 오염된 해안선은 무려 1천600㎞. 바닷새 25만마리와 해달 2천800마리, 물개 300마리, 대머리독수리 250마리와 연어 수백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엑손은 방제 비용으로 21억달러(1조9천억원)를 지출했다. 1994년 앵커리지 법원은 피해보상금 2억8천700만달러(2천700만원)와 벌금 40억달러(3조7천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벌금 액수는 당시 엑손의 1년 수익과 맞먹는 금액. 엑손은 어민, 관광안내인, 요식업자, 숙박업자 및 이들의 종업원, 심지어는 가끔 이 지역에서 낚시를 했던 외지인들에게까지 개별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엑손은 사상 최악의 오염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고 책임을 발뺌하는 실종된 기업윤리의 전형을 보였다. 결국 거대 기업 엑손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알래스카 오염의 주범’이란 낙인을 벗지 못했다.

기름 유출은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수십년을 간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최근까지도 기름이 알래스카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95년에 여수항 부근에서 좌초한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손상시킨 다도해 역시 상처가 여전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난해 12월 6일 발생)가 어제로 꼭 한 달을 맞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태안 앞바다는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았으나 유출된 기름덩어리가 타르로 변해 전남 서해안을 덮치고 있다. 어민들의 한숨소리와 함께 청정해역 서해가 죽어가고 있다.

/오주승 사회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